

“일본인”의 상상 속의 만주국, 대중 사업으로서의 제국 건설

루이즈 영 지음, 조원희·김도진 옮김, 『일본의 총력 제국: 만주와 전시 제국주의 문화』
(마르코폴로, 2025)를 읽고

정지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

I. 일본 ‘전후’의 끝에서 한국어로 다시 만나는 제국 이야기

올해 2월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전 이후 단일 정당 최초로 개헌안 발의선을 넘겼다. 개헌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과 무력충돌로 전쟁포기 조항을 포함하는 현행 헌법이 파병을 회피하기 위한 카드로 잠시 사용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의 패전 후 전시와 단절된 ‘전후’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평화와 민주를 근본이념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거듭 중언이 선언되면서도 이례적으로 길게 지속되었던 일본 특유의 ‘전후’의 끝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이다. 이 시점에 ‘전후’적 패러다임의 재고가 한창 본격화하던 탈냉전 시기를 배경으로 전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사회문화사 시각에서 풀어낸 영미권의 대표적인 저작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다시 접하니 감회가 새롭다. 『일본의 총력 제국: 만주와 전시 제국주의 문화』 이야기다.

저자인 루이즈 영(Louise Young)은 제국주의와 도시사를 중심으로 한 근대 일본 사회문화사 연구자로 위스콘신대학 매디슨 캠퍼스의 사학과에 재직 중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일본사학자 캐롤 글럭(Carol Gluck)의 지도 아래 1993년 컬럼비아대학 사학과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Mobilizing for Empire: Japan and Manchukuo, 1931~1945”를 수정하여 1998년에 펴낸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이 원저다.

원저는 출간 당해에 미국역사협회(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가 1800년 이후 동아시아사 분야 우수도서에 수여하는 존 K. 페어뱅크상(The John K. Fairbank Prize in East Asian History)과 미국대학출판협회(Th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Presses)에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일본 관련 우수도서에 수여하는 아리사와 히로미상(The Hiromi Arisawa Award)을 수상하면서 미국 학계에서 집중 주목을 받았다.¹ 일본 학계에도 발 빠르게 소개되었는데, 만주국 건설의 국제적 맥락을 다루는 제2장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이 삭제된 축약판 번역본(『総動員帝国: 満洲と戦時帝国主義の文化』)이 전쟁사 전문가인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 교수가 이끄는 공동 번역 작업의 결과로 2001년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간행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²

원저 출간 직후 임성모(2001)가 서평을 발표하는 등, 한국에서도 원저가 유관 분야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기는 했으나, 이번 번역으로 보다 많은 독자가 그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원문 기준 49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 표상문화, 정치경제, 이주라는 복수의 연구 분야와 정치인, 군부, 테크노크라트, 경제인, 지역 엘리트, 비엘리트 농민·노동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인간군의 행적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인하여 번역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연구다. 이런 이유로 일본어판의 경우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5명의 연구자가 번역에 동원되었다. 번역을 감행해 주신 두 분의 용기와 공들여 번역해 주신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번역의 수고로움에 비할까마는, 출간된 지 이미 30년 가까이 된 책을 평하는 일 또한 간단치만은 않다. 어떠한 저작도 특정한 시공간의 산물로서의 역사성을 지닌다. 그러한 역사성 속에서 이 책이 이루었던 성취와 과제로 남긴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책을 읽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책의 내용을 검토해보려 한다.

¹ 당시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서평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Garon(1998); Reynolds(1998); Nakano(1999); Boyle(2000); Fletcher(2000); Schmid(2000); Schencking(2001) 참조.

² 번역서 출간 당시 일본 학계 반응으로는 高橋(2001); 江口(2001); 猪股(2002) 참조.

II. 제국주의 연구와 제국 연구 사이에서: “일본 안의 만주국”이라는 틀

우선 책의 구성부터 살펴보면, 서론과 만주국의 국제적 맥락을 다루는 1부와 결론에 해당하는 5부를 제외한 본문은 군사 정복, 경제 개발, 대규모 개척이민이라는 세 가지 “활동 영역”(13쪽)을 각각 다루는 2~4부로 나뉜다. 책의 제2부는 ‘만주사변과 새로운 군사적 제국주의, 1931~1933’(3~4장), 제3부는 ‘식민지 개발과 만주에서의 실험, 1931~1941’(5~6장), 제4부는 ‘새로운 사회적 제국주의와 농업 개척이민 계획, 1932~1941’(7~9장)을 검토한다.

최근의 제국사 연구 경향에 밝으면서 『일본의 총력 제국』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제국’ 연구를 표방한 제목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하는지 다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일본’의 ‘안’과 ‘밖’으로서 본국(metropolis)과 만주국을 구분하고 때로 만주국을 본국의 대립항으로서의 제국으로 칭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14쪽). 이러한 구분은 근래 제국사 연구의 경향과 비교할 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근래의 제국사 연구가 식민 본국과 공식·비공식 식민지를 식민지 독립 이후의 국민국가 단위로 구분하여 서술해 온 방식을 재고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권역으로 제국을 이해하고,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도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작용과 본국-식민지뿐 아니라 식민지 사이를 포함한 다자간 영향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듯 책에서 사용하는 ‘제국’ 개념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구 대상과 접근법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만주와 전시 제국주의 문화”라는 부제다. 책은 만주사변 발발 이후의 전시 상황에서 당시 ‘내지’(内地)로 불렸던 일본 본국 내에서 정치인, 군부, 테크노크라트, 경제인, 지식인, 지역 엘리트, 비엘리트 농민, 노동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일본인”이 품었던 만주국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침략 전쟁과 제국의 확장에 사회 전체를 동원했으며, 그로 인해 일본 사회를 변화시켰는지를 다루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자는 “일본 안의 만주국”(24쪽)에 초점을 맞춰, “일본 국내에서의 제국 건설 과정”(25쪽)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제국 연구로서 본국의 안과 밖을 나눠 일본 국내에서의 제국 건설 과정에 집중하는 틀이 낡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원저 출판 시점의 영미권에서 일본의 제국 건설을 본국의 사회·문화의 문제로 들여온다는 접근은 분명히 새로운 데가 있었다. 이전까지의 일본 제국주의 연구가 대개 외교 혹은 정치경제 영역에 집중되었고(Duara, 1997: 1553) 본국과 식민지를 따로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사 연구자 안드레 슈미트(Andre Schmid)의 평가대로 책은 “일본 본토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에게 미친 제국의 영향력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한 최초의 영어 단행본”(Schmid, 2000: 964)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후 영미권 사학계에서 제국 일본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사 분야 연구의 축적이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책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러한 계보에 이름을 올린 연구로서 학술사적으로 의의를 갖는다.

일본 학계까지 함께 시야에 넣고 보면, 제국 일본에 접근하는 방식이 전환하는 과도기의 산물로서 이 책의 역사성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는 식민 제국으로서의 과거를 다루는 틀이 제국주의 연구에서 제국 연구로 전환하던 시기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일본의 전후 역사학계에서는 경제중심주의 관점에서 제국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비판에 치중하는 ‘일본제국주의론’이 지배적이었던 한편, 식민지 연구는 항일 민족주의의 저항을 강조하는 구식민지 출신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기는 분업적인 지식 생산구조 아래 본국의 지배와 식민지의 저항이라는 이항대립의 틀이 지속되었다. 1970년대부터 경제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식민사회, 이주, 개발 등으로 연구 주제가 확장되었지만,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상호작용과 후자의 전자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면서 사회문화사 분야로 확장하는 제국 연구의 관점이 본격화한 것은 탈냉전과 함께였다. 원저의 기초가 된 박사논문이 제출되었던 1993년 시점까지도 일본 학계 내에서도 하나의 편서에 신규 스타일의 연구가 뒤섞여 수록되는 실정이었다.³

“일본 안의 만주국”이라는 틀은 이처럼 제국주의 연구에서 제국 연구로의 전

³ 이 단락의 서술은 일본 내 식민지사 연구를 회고한 板垣 外(2010: 34-39)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환이 일어나던 과도기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 즉 지배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제국’은 “만들어진 것, 즉 지배를 가능케 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구조물(structures)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과정으로서의 제국주의와 구조로서의 제국 양쪽을 “포착”하여 “일본의 제국 프로젝트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려 한 시도(20-21쪽)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배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이해된 제국은 “일본 안의 만주국”이라는 틀에 한정된 책의 제목에 ‘제국’을 넣을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로 작용한다. 다만 이때 ‘제국’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법과 달리 상당히 협소하게 정의되는 데 반해, 책에서 제국은 때로 비공식 식민지까지도 포함한 일본 제국의 권역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만주국을 가리키기도 하며 서문에서 정의한 대로 지배 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책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독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점이 아쉽다.

“일본인의 눈을 통해” 바라본 “제국주의”(25쪽), 즉 실제 만주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빠져 있는 만주국 건설 이야기는 “아시아인의 존재가 아예 지워지는 일 또한 빈번했다는 점”을 들어 책에서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하는 “일본의 제국주의 서사”(25쪽)를 재생산하고 비대칭적으로 과잉 표상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피식민지인이 일본 국내에서의 만주국 건설에 참여하진 않았기 때문”(26쪽)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이야기가 아예 책의 분석 범위 밖에 놓인 점으로 인해 이 위험이 특히 가중된 점도 지나치기 어렵다.⁴ 당시 일본이 다민족 제국이었고 ‘일본인’의 경계 또한 유동적이었으며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이들도 존재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에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국주의적인 표상의 폭력과 그에 대한 비판 가능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⁴ 만주국 주민 가운데 중국인은 물론 일본의 “신민”이었던 조선인들과 일본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이 필요하다는 지적(Garon, 1998: 567-568; 猪股, 2002: 122)을 포함하여 피식민자의 존재를 지워버린 데 대해서는 당시에도 영미권과 일본 학계 양쪽에서 비판이 있었다(Nakano, 1999: 172; 高橋, 2001: 297).

⁵ 임성모(2001: 223)는 “일본(인)”이라는 범주를 “순수화”해버리고 “양의적 정체성”을 도외시하는 위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서술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서사와의 거리두기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저의 출간 무렵은 영미권 제국 연구자들이 지식 생산과 비대칭적인 권력의 상호 구성적인 관계에 대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문제 제기에 응답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받기 시작한 시기다. 1993년에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도 출판되었다. 『일본의 총력 제국』에 한발 앞서 발표된 단행본으로, 일본의 한반도 병합 과정을 다룬 피터 두우스(Peter Duus)의 『주판과 칼』(*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이 피식민자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서 일본 제국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인식론상의 한계와 (의도하지 않더라도 범할 수 있는) 표상의 폭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 그 단적인 예다.⁶ 서평을 쓰고 있는 필자는 2000년대에 미국 서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주판과 칼』 이후로 일본어 자료에만 의존하는 식민사 연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불문율이 생겼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당시 영미권 일본사 연구자들 사이에 구전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책은 이처럼 급변하는 학계의 분위기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일본 내의 도쿄를 제외한 주요 도시들의 사회문화사로 저자의 두 번째 책(Young, 2013)의 주제가 선회한 것은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의 결정으로도 읽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안의 만주국”이라는 틀에 강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틀은 사회적 상상과 미디어를 통해 대량생산·대량소비된 표상의 힘을 조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상상과 표상은 단지 허구나 허상이 아니라 현실을 생산하고 재생산해내는 힘을 갖는다. 제국이라는 맥락에서 그 힘은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와 지배관계를 구축하고 떠받친다. 책의 2~4부는 군사 정복, 경제 개발, 개척이민의 사례와 이러한 제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행적을 분석하여 만주국에 투사된 상상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영역에서 제국 건설을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편 “일본 안의 만주국”이라는 틀은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던 이전 시대의

⁶ 대표적인 예로 다음 세대 식민지 조천사 연구자인 안드레 슈미트의 비평(Schmid, 2000: 965-970) 참조.

접근법과 결부되기도 하는 한편, 책의 (현재적인 의미의) 제국 연구로서의 특징과 결부될 수도 있는 양가적인 것이다. 이 책의 목표가 만주사변에서 만주국 건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제국의 본국에 미친 영향이 본국의 사회와 문화 전반을 뒤흔들고 바꿀 정도로 심대했던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때, 목표를 성취하기에 효율적인 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국이 식민지에 가한 일방적인 작용을 전제하는 대신, 공식·비공식 식민지에서의 실험이 본국 ‘개조’를 촉발하는 이른바 식민지로부터 본국으로의 ‘역류’를 살펴보기에도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만주국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상상이나 새로운 경제 혹은 사회 정책 실험실로서의 이미지가 테크노크라트는 물론이고 지식인들까지도 만주국 건설과 운영에 관여하게 한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 자체는 원저 출간 당시에도 새로울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 출간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고 나중에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된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의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キメラ: 満洲国の肖像』, 中央公論社, 1993)과 같은 책에서도 이미 제시되었던 관점이기 때문이다.⁷ 『일본의 총력 제국』의 「멋진 신제국: 유토피아 건설의 꿈과 지식인」(제6장)과 같은 장이 원저 출간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제 자체로는 신선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총력 제국』의 강점은 만주국에 대한 상상이 정책 입안자나 지식인뿐 아니라 일본의 대중 또한 제국 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었음에 착안하여, “사회적 산물”이자 “대중 사업”(18쪽)으로서 제국을 다시 볼 것을 본격적으로 내세운 데서 나온다. 그런데 책의 이러한 접근은 제국사의 맥락보다는 사실 미일 합작의 결과물이자 전후 일본의 전시 역사 서술의 지배적인 역사관인 ‘태평양전쟁사관’에 대한 재고의 시도로 이해했을 때 더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⁷ 책의 참고문헌에는 『키메라』가 빠져 있다. 『키메라』의 학술적·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다소 의아한 일이다. 일본 내에서 나온 서평에서도 이것이 “다소 마음에 걸리는 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高橋, 2001: 303-304).

III. “대중 사업”으로서의 제국 건설: 민중의 책임이라는 문제 제기

책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할 때 “일본의 만주로의 팽창”을 위로 부터 바라보는 기존의 방식을 극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15쪽). 그리고 “역사 연구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제국과 전쟁에 대한 책임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의 공적 기억이 책임 문제를 회피한 채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고 국민(people)을 무모한 전쟁으로 내몰 았다는 도쿄전범재판에 기술된 시각을 고수”하면서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 난 후에도 여전히 캐롤 글러이 “수동태의 역사(history in the passive voice)”라고 지 칭한 희생 서사에 머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⁸ 이로 인해 당시의 보통 사람 들은 “제국의 대리인(agents)이 아닌 희생자에 불과했다는 대중적인 확신”이 지 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16쪽). 일본 안의 만주국 건설을 아래로부터 살피 “비정부 행위자”가 참여한 “대중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책의 주된 주장 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다(17-18쪽).

실제로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아래로부터 제국 건설에 참여하는 양상 을 추적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는 장절이다. 동원 과정에서 동원되는 측에도 많 든 적든 선택지가 존재했던 점이 실증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집 단과 개인이 만주사변과 만주국 성립이 새롭게 열어 보인 기회를 잡고자 기꺼 이 부름에 응한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기회는 빈곤으로부터의 탈 출, 이윤의 추구, 정치적 권력이나 발언권의 획득,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경 쟁 관계에서의 우위 선점, 정치·사회운동 조직의 확장, 공동체의 생존 등 각자 의 사정에 따라 제각기 달랐다. 만주국이 이처럼 다양한 욕망과 기대를 투사할 제국의 프로젝트였고, 대중적 사업이었다는 주장은 이들 사례 속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⁸ 인용문의 “군부”는 한국어판 원문에서는 “군사 집단”으로 쓰고 있으나, 일본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군부”로 바꿔 적었음을 밝혀 둔다. 일본어판(ヤング, 2001: 6)에도 군부로 번역되 었음을 확인했다.

라디오, 영화, 음반과 같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문화 산업 종사자들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발언하고 자신을 알린 문화인들에게 만주사변이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켜 사업 확장과 이윤 증대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자 경쟁적으로 전쟁열을 부추긴 정황을 보인 제3장 「전쟁열: 제국주의적 징고이즘과 대중매체」, 대중 민주주의 사회의 등장으로 여론 형성의 참여자이자 각종 선전과 캠페인의 대상으로 대중을 새롭게 인식하여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대중정치가 부상하고 정치 조직 및 집단 사이의 권력 및 인정 투쟁이 전쟁지원 운동에 대한 참여 경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조명한 제4장 「급행 제국주의」, 농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농촌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빈농을 중심으로 한 만주 개척 이민 모집에 앞장서는 실정을 포착한 제8장의 제3절 「풀뿌리 제국주의」와 같은 장절이 그것이다.

이처럼 대중 사업으로서의 제국 건설이 “전체적이기라기보다는 다원적”이었던 점으로부터 다수의 책임을 묻는 책의 결론이 도출된다. 제국의 프로젝트에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수천 개의 독립적인 세력이 모여 만들어진 누적된 힘”이었고 “다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던 만큼 책임 또한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는 것이다(500쪽). 「웁긴이의 말」에서도 만주개척이민자들이 제국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수혜자이기도 했음을 명시하는 등, 제국주의의 책임이 제국 건설에 참여한 모두에게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 책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여전히 과제로 안고 있는 한국의 독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는데(514쪽), 서평을 쓰고 있는 필자도 이 점에 동의한다.

특히 일본 국내에서도 위로부터의 강압과 프로파간다에 의해 전쟁이 강요되었다는 전후의 지배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이 30년 넘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각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연구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곤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⁹ 대중 사업으로서의 제국 건설과 그에 참여한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책의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도쿄전범재판의 역사관으로부터 제국에 대한 책임 문제나 제국의 희생

⁹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해서는 정지희(2024) 참조.

자 의식이 도출되었다는 전제는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인 사실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남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도쿄전범재판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과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범죄에 치중한 한편 식민 지배의 책임은 논외로 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주지하다시피 연합국이 대부분 공식·비공식 식민지를 영유한 제국이었던 사정이 있었다.

책에서 언급된 도쿄전범재판에 기술된 시각이란 요시다 유타카(吉田裕)가 ‘태평양전쟁사관’이라고 이름 붙인 역사관을 가리킨다. 이 역사관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에 초점을 두고 일본이 행한 침략전쟁의 기점을 1931년 만주사변으로 보아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연속된 전쟁으로 다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吉田, 1995: 31-33). 태평양전쟁사관은 전시 미국의 대일 전후 구상 과정에서 구축되었는데 일본의 강좌파(講座派) 마르크스주의 역사관과 올드리버럴리스트(올드·리버럴리스트)의 전시 일본에 대한 이해를 일부 반영한 것이었다.¹⁰ 일본의 패전 직후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대원칙 아래 시행된 초기 점령정책하에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가 주도한 전쟁 유죄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으며, 당시 공산주의자부터 올드리버럴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지식인들의 승인 아래 전후의 지배적인 역사관으로 뿌리내렸다.

태평양전쟁사관은 연합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책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만주사변 이후의 전쟁 행위만을 문제 삼는 한편 대만과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 문제는 철저히 도외시했다. 전쟁의 책임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군국주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해 ‘온건파’로 규정된 천황과 그 측근 정치인과 관료, 재계와 언론계의 책임은 면책하며,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지도자에게 속아 전쟁에 동원된 피해자로 그려 역시 책임을 묻지 않았다(吉田, 1995: 31-33). 태평양전쟁사관은 소수의 군국주의 지도자들의 전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전시와 단절

¹⁰ 올드리버럴리스트는 전후 일본에서 전전부터 활동한 앞선 세대 자유주의자를 일컫는 말이다. 강좌파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은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이와나미서점에서 출판된 『일본 자본주의 발달사 강좌(日本資本主義発達史講座)』 시리즈에서 일본 자본주의의 특징과 모순이 반(半)봉건적인 근대 일본의 특징에서 기인했으며 메이지 유신 이래의 천황제 국가는 절대주의 국가였다고 본 것에서 유래한 역사관이다. 전시 일본의 봉건성과 낙후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전시와 단절된 일본을 지향하는 전후 역사학의 근간이 되었다.

했다는 전후 일본 특유의 역사적 망각을 떠받쳤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쟁 배상을 최소화하고 일본을 공산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할 아시아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배치했던 미국 중심의 냉전 질서에 힘입어 그러한 망각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징집되었던 군인들은 전시 국가의 피해자로 인식되었어도 일본의 공식·비공식 식민지로 이주하여 지배 계층을 이뤘던 정착민들은 전후 신화 유지를 위해 주변화된 존재들에 가까웠다.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와 실패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흔들리고 나서야 정착민들의 회고 출간이나 식민지 연구가 가시화하고 탈냉전이 도래하고서야 그러한 작업이 본격화한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책의 기초가 된 박사논문과 원저는 탈냉전으로 태평양전쟁사관이 본격적으로 재고되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쓰였다. 그중에서도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던 풀뿌리 파시즘이나 민중의 전쟁 책임을 지적하는 연구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16쪽). 달리 말하면 이 책은 민중의 전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국사에 적용한 연구로 읽힌다. 다만 그런 이유에서인지 개척 이민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인상적인 대중 참여 사례가 모두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준전시상황하의 전쟁열이나 전쟁지원운동에 직결되며, 시기적으로도 1933년까지의 활동에 집중된다. 이로 인해 민중의 제국 책임과 전쟁 책임 사이의 무게 중심은 후자로 쏠린다. 물론 만주국의 경우 그 건설 과정이 만주사변이라는 군사적 침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전쟁 책임과 제국 책임을 연속선상에 놓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다만 만주국에 초점을 맞춰 만주사변 이후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주의”(146쪽)를 만주국 제국 건설의 새로움으로 내세우는 책의 접근은 태평양전쟁사관을 문제 삼는 제국 연구로서는 한 가지 난점을 초래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제국주의를 침략전쟁의 문제로 환원하고 일본의 중국 대륙으로의 확장을 문제 삼아 태평양전쟁까지를 일련의 전쟁으로 보는 태평양전쟁사관의 전제를 반복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설이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과 중국 민족주의 운동의 도전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중국 전선에만 강조점을 두는 태평양전쟁사관의 인식론적 틀 자체를 온존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자도 이 점을 의식하여 책에서 조선, 타이완과 같은 다른 식민지나 동남아시아의 피점령지에서의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다루지 않더라도 염두에는 두고 있었으며 그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67-68쪽). 만주국 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제국주의가 등장했음을 강조하면서, 그 주요한 특징으로 극도로 군사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 이전과 달리 개발을 강조했다는 점, 사회적 제국주의가 등장했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¹¹ 결론인 제10장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실은 19세기 이래 일본 제국주의 계보 안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전개(500-508쪽)를 보이는데, 이는 만주사변 이후 침략전쟁만을 강조해 온 기존 시각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이러한 전개는 만주국 건설 과정에서 등장한 제국주의의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도록 만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IV. 만주국 건설과 ‘새로운 제국주의’: “총력 제국주의”?

『일본의 총력 제국』 자체는 만주국 연구라고 볼 수 없지만 영미권 학계에서 만주국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여 2000년대 이후 만주국 연구 붐이 일어나는 데 일조한 연구로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붐을 견인한 본격적인 만주국 연구로는 한국에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2008, 나남)로 번역 소개된 프래신짓트 두아라(Prasenjit Duara)의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Rowman and Littlefield, 2003)과 일련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나중에 수정과 가필을 거쳐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문학과 지성사, 2016)¹²으로 출간된 한석정의 박사논문(Suk-jung Han, “Puppet Sovereignty: The State Effect of Manchukuo, from 1932 to 1936”,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95)과 그와 관련된 논문들도 이러한 붐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¹¹ 사회적 제국주의는 “본국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불만과 혼란을 국외로 투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22쪽).

¹² 『만주 모던』은 *The Origin of the 1960s Korean Developmental Regime: Manchurian Modern*(Lexington Books, 2024)으로 번역 간행되었다.

새로운 만주국 연구에서 만주국의 건국은 국민국가론에 입각하여 트랜스내셔널한 시각에서 국가와 민족을 역사적 발명으로 다시 보게 하는 사례이자 새로운 제국주의의 등장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재조명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제국주의란 종속국(client state)을 독립적인 주권국가 상태로 둔 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제국주의로서, 일본에 의해 만주국에서 실험되었고, 냉전 시대 탈식민화하는 세계 질서 안에서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지배방식을 가리킨다. 두아라(Duara, 2007)는 “‘자유국’ 제국주의(imperialism of ‘free nations’)”라고 명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발흥하면서 식민 제국주의의 정당화가 불가능해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제국주의다. 다카시 후지타니(Takashi Fujitani)가 밝혀냈듯, 일본의 만주국 지배는 미국의 전후 구상에서 일본 점령의 직접적인 모델로 참조되었고(Fujitani, 2001), 반식민 제국주의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모델은 이후에도 미국이 탈식민화하는 아시아에서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가 명명한 대로 “냉전기 ‘자유를 위한 제국’(Cold War ‘empire for liberty’)”을 자임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Yoneyama, 2016: iix-ix, 225 fn2).

『일본의 총력 제국』에서도 만주국 건설이 “식민통치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제국주의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자 민족주의 운동의 고양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64쪽, 66쪽). 이 제국주의를 “자주적 제국주의(autonomous imperialism)”라고도 규정하며 당시 일본이 이 제국주의를 고안하는데 “민족해방의 주체라는 이념”을 활용한 점도 지적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만주국은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였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식민지 제국”(30쪽)이라는 맥락에 위치시켜 이해한다. 소련이 동유럽에 영향을 미친 것이나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정확히 제국주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국주의에 대한 필자의 정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못 박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19쪽) 저자에게 만주국 건설 과정에서 등장한 제국주의는 제국 일본과 만주국의 붕괴와 함께 완결된 역사에 속한다.

하지만 2001년에 나온 일본어판 서문에서 저자는 어릴 때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여론의 고양을 목도하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이 일본 제국주의 연구를 할 때도 지속되었으며,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 양쪽에서 “총력 제국”이 “기능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개진하기도 했다(ヤング, 2001: ix-x). 이것이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물어야 하는 것은 총력 제국주의란 어떠한 제국주의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번역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총력’으로 번역된 원문의 ‘total’은 ‘총력’ 이외에 ‘총체’로도, ‘총동원’으로도 번역 가능하다(513쪽). 실제로 일본어판에서는 ‘총동원’으로 번역되었다. 이 문제는 원어가 다의적이고 한영 양 언어 사이의 일대일 대응이 불가능한 탓이기도 하지만, 총력 제국주의의 개념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총력 제국주의는 근대화가 초래한 국민국가, 산업자본주의, 기타 여러 혁명적 변화로 인해 등장한 제국주의를 가리키는 데, 이때 ‘total’은 총력전처럼 총력 제국 역시 국내 “전선”에서 대중적이고 다각적인 사회의 동원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총력전’과 유비관계에 있기도 하고, 총력 제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중첩된 여러 작용이 연쇄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만주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음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22-23쪽).

만주국 건설에 관련한 제국주의가 근대적이었음은 내셔널리즘, 대중 정치, 새로운 미디어 기술, 근대적인 지식과 국가장치의 활용 등, 책에서 묘사된 여러 동원과 참여의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지적이 일본의 제국주의나 침략전쟁을 봉건적 잔재와 후진의 탓으로 치부했던 기존의 시선을 문제시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근대적인 제국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총력’적인지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¹³ 총력전과 유비관계에 있다면 임성모(2001: 221)가 지적한 것처럼 총동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화제가 되었던 ‘총력전과 현대화’론 등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여러 요인이 하나가 되어 제국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되었다는 주장 자체는 ‘총력전과 현대화’론이나 일본 학계에서 유행한 ‘20세기 시스템’론의

¹³ 원저 출간 당시 근대 제국은 모두 총력 제국인지, 특정 제국이 “더 총력적”이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해서는 Fletcher(2000: 250) 참조.

기초가 되는 탈콧 파슨스 식의 사회 시스템론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890년대와 1900년대 초 조선에 ‘총력’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다는 서술은(23-24쪽) 총력전과의 유비관계라는 설명과 모순될 뿐 아니라 몰역사적이다.¹⁴ 잘 알려져 있듯이 총력전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두했다. 결국 책에서 말하는 ‘total’ 개념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에 총력 제국주의는 미일 양 제국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총력 제국주의라는 틀로는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등장한 새로운 제국주의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V. ‘지금, 여기에서’ 『일본의 총력 제국』 읽기

『일본의 총력 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연구하는 방식이 제국주의 연구에서 제국 연구로 넘어가던 과도기이자, 탈냉전의 도래로 패전과 냉전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도외시되었던 민중의 전쟁 책임과 제국의 기억이 문제시되기 시작한 시점에 쓰인 책이다. 이 책의 전제와 접근 방식 또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책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과 위에서 논한 문제들이 약 30년 전의 다른 맥락에서 쓰인 책을 ‘지금, 여기’에서 읽을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기쁘겠다.

책에서 야심차게 내세운 총력 제국주의 혹은 총력 제국이라는 개념이 다른 연구에 빈번히 차용되지도, 학술사에서 중요한 용어로 자리를 잡지도 못한 점에서도 미루어볼 수 있듯이 이 연구의 장점은 개념화나 이론화에 있지 않다. 대신 만주국이 일본 본국 내에 미친 영향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했음을 보이기 위해 (에스닉한 의미의 ‘일본인’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행적을 망라하

¹⁴ 조선에 총력 제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자기모순”적임은 임성모(2001: 221-222)도 지적한 바 있다.

고 있어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설 당시 일본 본국 내의 반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해당 주제에 대한 사실상의 백과사전”(Boyle, 2000: 554)이라는 원저 출간 당시의 평이 책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설명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2부부터 4부는 각각 하나의 단행본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어 2차 자료에만 의존한 서술도 자주 눈에 띄며 밀도와 짜임새 면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당대의 주요 쟁점을 한 눈에 보기를 원하면서 입문서 이상의 수준을 원하는 독자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여타 분과에 비해 사회문화사 분야의 단독 저서가 아직 많지 않은 국내 일본사학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각자의 사정에서 희망과 기대를 만주국에 투사하여 참여한 “대중 사업”으로서의 제국 건설 과정을 그려내어 그 책임 또한 다수에게 있음을 보인 점은 현재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을 대상으로 발행된 잡지, 팸플릿, 여행안내서, 엽서, 기념품, 상공회의소 기록, 개척이민 사업에 참여했던 지방과 촌락 관련 자료와 같이 방대한 1차 자료를 총동원한 점도 언급되어야 한다. 다만 가해자성을 내포한 피해자성에 주목한 점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때, 일본어판에서는 그러한 가해자성을 묘사하는 단어나 어구가 상당수 삭제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제9장 「제국의 희생자들」의 경우 한국어판에서는 “제국 안에서 자신들의 몫”(their pieces of empire)을 향유한 것으로 번역된 어구(477쪽)가 일본어판에서는 “제국에 의한 평화(piece)”(ヤング, 2001: 274)를 누린 것으로 수정되었고, 원문의 “착취”라는 표현은 삭제되거나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었다(ヤング, 2001: 268-269). 이러한 정치성을 고려할 때 일본어판을 경유한 중역이 아니라 원저를 오롯이 옮긴 번역자 두 분의 노고 덕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책을 읽는 의미가 한층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임성모. 2001. “만주국 건설 이야기의 새로움과 낡음: Louise Young, 『Japan's Total Empire』.” 『사립』 17: 213-223.
- 정지희. 2024. “전시 일본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권력: 탄압과 프로파간다, 그 너머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서술을 위한 시론.” 『동양사학연구』 168: 145-196.
- 板垣竜太·戸邊秀明·水谷智. 2010. “日本植民地研究の回顧と展望: 朝鮮史を中心に.” 『社会科学』 40(2): 27-59.
- 猪股祐介. 2002. “書評企画『満洲』と動員される社会.” 『相關社会科学』 11: 119-123.
- 江口圭一. 2001. “新刊紹介『満洲と戦時帝国主義の文化: 総動員帝国』.” 『史学雑誌』 110(9): 1738-1739.
- 高橋久志. 2001. “書評 L・ヤング(加藤陽子他訳)『総動員帝国: 満洲と戦時帝国主義の文化』.” 『軍事史学』 37(2・3): 296-304.
- ヤング, 루이즈. 2001. 『総動員帝国: 満洲と戦時帝国主義の文化』, 加藤陽子·川島真·高光佳絵·千葉功·古市大輔 翻訳. 東京: 岩波書店.
-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 戦後史のなかの変容』, 東京: 岩波書店.
- Boyle, John Hunter. 2000.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Review).” *China Review International* 7(2): 552-554.
- Duara, Prasenjit. 1997. “A Book Review: Peter Duus,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itors. *The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2(5): 1553-1554.
- . 2007. “The Imperialism of ‘Free Nations’: Japan, Manchukuo, and the History of the Present.” in Ann Laura Stoler, Carole McGranahan, and Peter C. Perdue eds. *Imperial Formations*, 211-233. Santa Fe: School for Advanced Research Press.
- Fletcher, W. Miles. 2000. “Review: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y Louise Young.”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6(1): 246-250.
- Fujitani, Takashi. 2001. “The Reischauer Memo, Mr. Moto, Hirohito, and Japanese American Soldiers.” *Critical Asian Studies* 33(3): 379-402.
- Garon, Sheldon. 1998.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y Louise Young.” *Monumenta Nipponica* 53(4): 565-

568.

- Nakano, Yoichi. 1999. "Review: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y Louise Young."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30(1): 171-172.
- Reynolds, E. Bruce. 1998. "Book Review: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7(4): 1181-1183.
- Schmid, Andre. 2000. "Colonialism and the 'Korea Problem' in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Japan: A Review Articl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4): 951-976.
- Schencking, J. Charles. 2001. "Review: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Modern Asian Studies* 35(1): 245-247.
- Yoneyama, Lisa. 2016.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Young, Louise. 2013. *Beyond the Metropolis: Second Cities and Modern Life in Interwar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